

국가직 9급

행 정 학
해설위원 : 방 성 은 교수

<총 평>

- 이론과 법령에서 2문제가 깊게 출제되었으며 1문제는 주의를 요하는 합정성 문제여서 그동안의 국가9급 시험에 비하여 채감난이도는 약간 높았습니다.
- 하지만 이를 제외한 나머지 문제는 기본개념을 정확히 생각한다면 쉽게 고득점할 수 있었던 평이한 문제였습니다.
- 까다로웠던 3개의 문제를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1) 4번 문제 : 가장 깊게 출제가 된 문제인데 서울7급과 지방7급에 대비하는 지방자치론(2012 비타민 지방자치론)에서 다루었던 내용이 그대로 출제되었습니다. 하지만 비타민행정학 기본서의 내용을 잘 숙지하였다면 이해와 응용을 통하여 풀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 (2) 6번 문제 : 법령에 규정된 기관을 묻는 문제로서 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보다 깊게 파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3) 8번 문제 : 기본개념(내적 타당도)을 대충 알고 있는지 아니면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물어본 문제로서 합정성 문제라 할 수 있었습니다.
- 따라서 앞으로는 기본개념이나 용어에 대한 이해없이 책만 무조건 그냥 읽어 내려가는 공부를 한다든지 두문자 암기법으로 땀치리함으로써 이해를 소홀히 하는 기존 공부방식으로는 절대 고득점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여 제목부터 시작하여 기본개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해와 응용을 할 수 있는 공부방식으로 전환해야 고득점할 수 있습니다.
- 기타 특이한 사항으로 총론 성격인 1편은 3문제로 적게 출제된 반면, 각론 중 2편 정책은 5문제, 4편 인사행정은 4문제로 많이 출제되어 편별 비중 편차가 컸습니다.
- 수험생의 편의를 위하여 편별로 재구성하였습니다.

01. 가우스(J. M. Gaus)가 지적한 행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 ① 국민(people) ② 장소(place)
③ 대화(communication) ④ 재난(catastrophe)

해설 : 대화는 가우스가 제시한 생태환경에 해당되지 않는다. 답 : ③, ④

3. 가우스(J. M. Gaus)의 생태론 - 2012 비타민행정학 225

(1) 의의 : Gaus는 「행정에 대한 반성(Reflections on the Administration)」(1947)에서 정부기능은 환경과의 유기적 상호관계에서 파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 생태환경과 정부기능 예시

- ① 주민(people) : ex) 국민의 수명연장 또는 핵가족화 ⇨ 사회보장제도의 필요성과 변화
- ② 장소(place) : ex) 인구의 도시집중 ⇨ 대도시 행정문제(교통·공해·범죄 등)와 대처
- ③ 물리적 기술(physical technology) : ex) 자동차의 발달 ⇨ 도로건설과 이를 관리하기 위한 기술력에 대한 세금부과/정보통신의 발달 ⇨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 ④ 사회적 기술(social technology) : ex) 독점기업의 출현 ⇨ 독과점방지법 제정과 규제정책
- ⑤ 욕구, 이념(wish & ideas) : ex) 최소의 행정 ⇨ 야경국가, 적극적 역할 요구 ⇨ 행정국가
- ⑥ 재난(catastrophe) : ex) 대화재 ⇨ 방화시설과 비상구 등에 대한 규제
- ⑦ 인물(personality) : ex) 지도자의 인품, 리더십 ⇨ 행정에 중요한 영향

02. 미국, 영국 등 영미국가에서 강조하고 있는 신공공관리 행정개혁의 방향과 거리가 먼 것은?

- ① 정책기능과 집행기능의 통합에 의한 책임행정체제 확립
- ② 정부와 시장기능의 재정립을 통한 정부역할 축소
- ③ 공공부문 내에 경쟁원리와 시장기제 도입
- ④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 노력을 통한 고객지향적 행정체제의 확립

해설 : ① 신공공관리론은 정책결정기능(stering : 목표 및 전략설정)과 정책집행기능(rowing : 집행 및 서비스 제공)을 분리시켜 정부는 정책결정기능에 집중하고 정책집행기능은 민간에 이양함으로써 촉진적 정부를 통한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처방한다. 한편 내부적으로 책임운영기관이 정책결정과 집행의 분리를 통하여 탄생된 집행중심조직이다(2012 비타민행정학 281~282, 799). 답 : ①

03. 행정개혁수단 가운데 테일러(F. Taylor)의 과학적관리법 내용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은?

- ① 다면평가제(360-degree appraisal)
- ② 성과상여금제(bonus pay)
- ③ 고위공무원단체(Senior Civil Service)
- ④ 목표관리제(MBO)

해설 : ① 과학적 관리론은 직무분석(시간연구와 동작연구)을 통하여 적정과업량을 설정하고 차별성과급을 통하여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경영합리화운동이다. 합리적 경제인에 바탕을 둔 차별성과급은 신공공관리론의 신관리주의(New Taylorism)에 영향을 주었으며 5급 이하 공무원에게 성과에 따라 차별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이 과학적 관리론을 잘 반영한다(2012 비타민행정학 211, 1167페이지). 답 : ②

04. 지역사회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력구조에 대한 이론과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신다원론(neo-pluralism) - 기업이나 개발관계자들의 우월적 지위를 주민이나 지방정부가 용인하지 않는다.
- ② 엘리트론(elite theory) - 엘리트 계층 내의 분열과 다툼이 최소화되기 때문에 내부 조정과 외부 사회화의 과정은 의미를 지니기 어렵다.
- ③ 성장기구론(Growth Machine) - 성장연합과 반성장연합의 대결 구도에서 대체로 반성장연합이 승리하여 권력을 쟁취한다.
- ④ 레짐이론(regime theory) - 지방정부와 지방의 민간부문 주요주체가 연합하여 권력기반을 형성한다.

해설 : ① 신다원론은 기업의 특권적 지위와 정부의 능동적 역할을 인정하는 이론이다. 지대부분의 지역사회 구성원들은 지역간 경쟁에서 이기기 위하여 또 이를 위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업과 개발관계자들에게 특별한 영향력과 지위를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업도시개발특별법(2004. 제정 : 민간기업이 특권을 지니고 주도적으로 지역을 개발)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틀린 지문이다. ② 엘리트 계층은 응집력이 있지만 때론 분열과 다툼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나름대로의 조정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열과 다툼은 엘리트 계층 전체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마무리된다. 엘리트 계층은 이러한 조정메커니즘을 유지함은 물론 엘리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이념, 제도, 문화를 끊임없이 만들어 나가며 사회화 과정을 통해 이를 대중에게 전파한다. 따라서 엘리트 간 내부조정과 외부로의 사회화과정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므로 틀린 지문이다. ③ 성장기구론은 지역사회의 정치와 경제를 토지의 가치를 높이하고자 하는 토지자산가와 개발관계자들이 주도한다는 이론이다. 즉, 토지와 부동산의 교환가치를 높이기 원하는 토지관련 기업인의 존재와 이들을 중심으로 하는 성장연합의 존재와 역할을 중시하고 이들이 지역과 도시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활동을 중시한다. 토지자산가와 개발사업자 그리고 이들과 함께 토지개발에 따른 이익을 나눌 수 있는 기업인, 자영업자, 금융기관으로 이루어진 성장연합과 이를 반대하는 일반 지역주민과 환경운동집단 등으로 이루어진 반성장연합의 투쟁을 하게 되는데 대체적으로 도시성장을 촉진하고자 하는 성장연합이 우위를 점하게 된다. 따라서 틀린 지문이다. ④ 레짐이론은 도시에서의 지방정부와 다양한 민간주체와의 상호의존성과 협력관계를 다룬 이론이다. 자원과 능력이 부족한 지방 정부는 민간부문의 자원과 영향력을 끌어들이게 되는데 두 부문의 협력은 연합의 형태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 연합은 비공식적이며 그 참여자가 바뀌기도 하지만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향이 있어 레짐이라고 하며 지방정부의 정권이 교체되어도 그대로 존속할 수 있다. 지방정부와 레짐 참가자들은 지역사회를 이끌어 갈 힘 또는 권력을

가지고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이들이 가지는 힘은 “누구를 통치하기 위한 힘”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을 위한 일을 하기 위한 힘”이다. 따라서 지방정부와 지방의 민간부문 주요주체가 연합하여 권력기반을 형성하므로 맞는 지문이다(2012, 비타민 지방자치론 241~247페이지, 2012 비타민행정학 303, 382~389페이지). 답 : ④

05. 정책네트워크이론(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책네트워크이론의 대두배경은 정책결정의 부분화와 전문화 추세를 반영한다.
- ② 철의삼각(iron triangle)모형은 소수 엘리트 행위자들이 특정 정책의 결정을 지배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 ③ 이슈네트워크(issue network)모형은 쟁점을 둘러싼 정책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중시한다.
- ④ 정책과정에 대한 국가중심 접근방법과 사회중심 접근방법이라는 이분법적 논리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해설 : ④ 정책네트워크모형은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다양한 행위자의 동태적 상호작용을 다룬 이론으로서 국가중심 접근방법(조합주의)과 사회중심 접근방법(다원론과 엘리트론)을 극복하는 관점에서 대두되었다(2012 비타민행정학 391페이지). 답 : ④

(2) 이론적 배경 - 2012 비타민행정학 391페이지

- ① 그동안 주류이론이었던 다원주의와 엘리트주의, 조합주의 모형과 같은 사회중심이론이나 국가중심이론은 국가와 사회의 이분법적 논리에서 나타나는 이론적 한계와 현실 설명력의 한계가 나타나게 되었으며 그 대안적 이론으로 정책네트워크 모형이 1960년대 하위정부론과 1970년대 이슈네트워크론을 기반으로 하여 1980년대에 등장하였다.

06. 정책평가 수행을 위해 설립된 기구와 법적 근거가 바르지 않게 연결된 것은?

- ① 복권위원회 - 복권 및 복권기금법
- ②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③ 보조사업평가단 - 지방공기업법
- ④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해설 : ① 복권위원회는 복권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복권수익금 사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근거하여 2004년 4월 1일 출범되었다. 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8조 6항]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의 효율적인 수행과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전문적·기술적인 연구 또는 자문을 위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경영평가단(이하 "경영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평가단은 지방공기업법이 아니라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기관이다. 지방공기업법에는 지방공기업을 평가하기 위한 별도의 기관설립 규정이 없으며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은 정책, 경영평가, 경영진단 등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를 운영한다는 규정이 있다.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15조 2항]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사업을 평가하고 존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보조사업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정부업무평가기본법-21조 4항]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합동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하에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답 : ③

07. 정책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콕(R.W. Cobb)은 주도집단에 따라 정책의제설정 유형을 외부주도형, 동원형, 내부접근형으로 분류하였다.
- ② 바크라흐(P. Bachrach)와 바라츠(M. Baratz)는 신다원론(neo-pluralism) 관점에서 정치권력의 두 개의 얼굴 중 하나인 무의사결정을 주장하였다.
- ③ 킹던(J. Kingdon)은 어떤 중요한 시점에서 문제, 정책, 정치 등 세 가지 흐름(streams)의 결합에 의하여 정책의제가 설정된다고 주장하였다.
- ④ 달(R. Dahl)은 다원론(pluralism) 관점에서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특정한 어느 개인이나 집단도 주도권을 행사하기 어렵다

고 주장하였다.

해설 : ② 바크라흐(P. Bachrach)와 바라츠(M. Baratz)가 <권력의 두 얼굴(two face of power)>에서 무의사결정(지배엘리트는 자신의 이익에 도전하는 이슈를 억압)은 신다원론이 아니라 신엘리트론이다(2012 비타민행정학 384페이지). 답 : ②

08. 정책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책평가의 외적 타당도란 특정한 상황에서 얻은 정책평가의 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 ② 정책평가의 내적 타당도란 관찰된 결과가 다른 경쟁적 요인들 보다는 해당 정책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 ③ A라는 정책이 집행된 이후에 그 정책의 목표 B가 달성된 것을 발견한 경우, 정책평가자는 A와 B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 ④ 신뢰도는 동일한 측정도구를 반복하여 사용했을 때 동일한 결과를 얻을 확률을 의미한다.

해설 : 주의를 해야 할 문제이다. ③ 내적 타당도란 일반적 의미의 타당성으로서 인과적 결론의 적합성 정도를 의미한다. 즉 나타난 결과가 추정된 원인(정책수단)에 기인한 것인가를 정확히 판단해 낸다면 내적 타당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정확히 판단해 내려면 인과적 추론이 정확해야 하는데 시간적 선행조건(시차적으로 원인이 결과에 앞서야 함), 공동변화의 조건(원인과 결과는 공동으로 변해야 함), 경쟁가설 배제의 원칙(제3의 변수에 의하여 설명될 가능성이 배제되어야 함) 3가지를 충족해야 한다. 따라서 A라는 정책이 집행된 후에 그 정책의 목표인 B가 달성되었다고 해서 A, B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2012 비타민행정학 608페이지). 답 : ③

(3) 내적 타당성(internal validity) - 2012 비타민행정학 608페이지

① 의 의

- ㉠ 일반적 의미의 타당성으로서, 내적 타당성은 인과적 결론의 적합성 정도를 의미한다. 즉, 나타난 결과가 추정된 원인(정책수단)에 기인한 것인가를 정확히 판단해 낸다면 내적 타당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 ㉡ 쉽게 말하면 진정한 정책효과가 있을 때 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거나 사실상 정책효과가 없을 때 이 효과가 없다고 정확히 밝혀내면 내적 타당성이 높다고 한다.
- ㉢ 정책평가를 위하여 고찰된 모든 통계적 실험적 방법들은 내적 타당성을 제고하는 것을 1차적 목표로 삼고 있다. ex) 과식이 10kg 체중 증가의 원인인 것을 정확히 밝혀 냄.

② 인과적 추론의 조건

- ㉠ 시차적으로 원인이 결과에 앞서야 하고(시간적 선행조건, 시간적 선후성)
- ㉡ 원인과 결과는 공동으로 변해야 하며(공동변화의 조건, 연관성)
- ㉢ 결과는 원인에 의해서만 설명되어야 하며 제3의 변수에 의하여 설명될 가능성이 배제되어야 한다(경쟁가설 배제의 원칙, 비허위성).

09. 조직구조의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게 연결될 것은?

- ㉠ 수평적 조정의 필요성이 낮을 때 효과적인 조직구조로서 규모의 경제를 제고할 수 있다.
- ㉡ 자기완결적 기능을 단위로 기능간 조정이 용이하여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이 신속적이다.
- ㉢ 조직구성원을 핵심 업무과정 중심으로 조직화하는 방식이다.
- ㉣ 조직 자체 기능은 핵심역량 위주로 하고 여타 기능은 외부계약관계를 통해서 수행한다.

① ㉠ - 사업구조

② ㉡ - 매트릭스구조

③ ㉢ - 수직구조

④ ㉣ - 네트워크구조

해설 : ① ㉠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로 구분하는 기능구조에 대한 내용이다. ② ㉡은 사업부 내에 기능을 모아 하나의 사업부에서 자기관결적 기능을 하게 하는 사업구조에 대한 내용이다. ③ ㉢은 수평구조에 대한 내용이다. 수평구조는 핵심업무(과업)의 과정(프로세스)을 중심으로 재설계함으로써 수직적 계층과 부서간 경계를 제거하는 대단히 유기적인 주직구조이다. ④ ㉣은 네트워크구조에 대한 내용으로서 옳은 지문이다(2012 비타민행정학 750페이지). 답 : ④

⑤ 네트워크 구조(모듈형 구조) - 2012 비타민행정학 752페이지

㉠ 의 의

㉡ 개념

i) 네트워크 구조는 한 조직 내에서 모든 기능을 수행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조직의 자체기능은 전략·계획·통제 등 핵심역량 위주로 합리화하고 여타 부수기능들은 외부기관들과의 계약관계(아웃소싱)를 통하여 수행하는 구조이다.

10. 국무총리 소속기관이 아닌 것은?

- ① 공정거래위원회 ② 금융위원회
③ 방송통신위원회 ④ 국민권익위원회

해설 :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소속이고 나머지 기관은 국무총리소속이다(2012 비타민행정학 781페이지). 답 : ③

① 행정위원회 - 2012 비타민행정학 781페이지

㉠ 비소속 : 국가인권위원회(비소속 독립기관, 11명의 인권위원)

㉡ 대통령 소속

㉢ 방송통신위원회 : 위원장 포함 5명의 상임위원,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명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

㉣ 방송통신위원회 기존 방송위원회(방송정책·규제)+기존 정보통신부 일부(통신정책·규제)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위원장과 상임위원 2명 포함 10명, 위원장은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 및 조정,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 등 강화된 기능을 부여하고 사무처를 설치<과학기술기본법 개정(2010. 12), 시행(2011. 3)>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위원장과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15명,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대통령이 위촉
⇒ 후술

㉧ 국무총리 소속

㉨ 금융위원회(위원장 포함 9인의 위원)

㉩ 금융위원회 기존 금융감독위원회+기존 재정경제부 일부(금융정책)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포함 9인의 위원)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1인, 부위원장 3인 포함 15인의 위원)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국가청렴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

11. 우리나라의 정부조직과 기능 간의 연결이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교육과학기술부 - 원자력 연구
② 기획재정부 - 예산편성지침 수립
③ 국무총리실 - 공기업 평가
④ 문화체육관광부 - 국정홍보

해설 : ③ 공기업 평가는 기획재정부 장관 소관이다. 국무총리실은 주요 정책과제 부문에 대한 정부업무평가를 담당하고 있다(2012 비타민행정학 792페이지). 답 : ③

12. 전자정부와 지식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전자정부의 발달과 함께 공공정보의 개인 사유화가 심화되었다.
② 지식관리는 계층제적 조직보다는 학습조직을 기반으로 한다.
③ 전자 거버넌스의 확대는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가능성을 높인다.
④ 정보이용 계층에 대한 정보화정책으로서 정보격차 해소 정책이 중요해졌다.

해설 : ① 전자정부는 정보통신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지게 한다. 따라서 전자정부의 발달과 함께 정보공개가 활성화되고 정부와 시민 간 정보의 공유가 원활해지므로 개인 사유화가 퇴조된다. 따라서 틀린 지문이다. ④에서 정보격차 해소정책은 보편적 서비스 정책을 의미한다(2012 비타민행정학 889페이지). 답 : ①

④ 전자정부의 특징적 구성요소 - 2012 비타민행정학 889페이지

㉠ 정보통신에 바탕을 둔 정부 : 전자정부는 디지털혁명(Digital 化+Network 化)으로 인한 정보통신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다.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여 정보의 통합관리·공동이용을 도모하며 국민에 대한 서비스 전달의 전자화를 촉진하며 통합적 전산정보관리와 인터넷에 의한 온라인 서비스의 확대는 신속하고 편리한 대민봉사를 가능하게 한다.

13.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하는 근무성적평정 오류는?

임용된 이후 단 한 번도 무단결근을 하지 않던 어떤 직원이 근무성적평정 하루 전날 무단결근을 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이 직원은 평정요소 중 직무수행태도에 대하여 낮은 점수를 받게 되었다.

- ① 집중화 오류(central tendency error)
② 근접효과로 인한 오류(recency effect error)
③ 연쇄효과로 인한 오류(halo effect error)
④ 선입견에 의한 오류(personal bias error)

해설 : ② 최근에 발생한 사건을 중시하여 최신의 근무성적에 대한 인상을 가지고 평정하는 것으로서 시간적 착오 중 근접효과로 인한 오류에 해당된다(2012 비타민행정학 1098페이지). 답 : ②

14. 인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직위분류제는 동일직무에 동일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② 한국의 공무원제도는 계급제적 토대 위에 직위분류제적 요소가 가미된 혼합형 인사체계이다.
③ 특정직 공무원은 직업공무원제의 적용을 받는다.
④ 비교류형 인사체계는 교류형에 비해 기관 간 승진 기회의 형평성 확보에 유리하다.

해설 : ③ 특정직 공무원도 신분보장이 되는 경력직 공무원이므로 직업공무원제 적용을 받는다. ④ 비교류형은 기관 간 인사교류가 곤란한 제도로서 부처 간 승진기회가 다를 경우 특히 승진여건이 좋지 않은 기관의 경우 승진기회의 형평성이 확보되지 못한다. 따라서 틀린 지문이다(2012 비타민행정학 1116페이지). 답 : ④

15. 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근거로 가장 미약한 것은?

- ① 정치적 무관심화를 통한 직무수행의 능률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
② 정치적 개입에 의한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
③ 행정의 계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
④ 공무원 집단의 정치세력화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

해설 : ① 정치적 중립은 정당의 부당한 간섭 배제와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를 내

식이다. 즉, 민간이 자금을 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Build)한 후 국가·지자체로 소유권을 이전(Transfer)하고, 국가·지자체 등에 시설을 임대(Lease)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방식이다(2012 비타민행정학 1455페이지).

답 : ㉔

20. 지방세 세원확보 원칙과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충분성 - 지방세 수입이 지방사무의 양에 비교하여 충분하지 못하다.
- ② 안정성 - 소득과세 중심으로 세원 확보가 매우 불안정하다.
- ③ 보편성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세원이 심각하게 불균형적이다.
- ④ 자율성 - 지방세의 세목설정 권한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해설 : ① 안정성원칙은 경기변동에 관계없이 세수가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안정적 수입을 확보하게 하는 재산세 비중이 낮고 거래의 영향을 많이 받는 취득세 비중이 높으므로 안정성 원칙이 저해된다. 또한 소득이나 소비과세 중심이 아니라 재산과세 중심이므로 신장성원칙이 저해된다(2012 비테 민행정학 1625페이지).

답 : ②

부패신고	재산신고	선물신고	병역사항 신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운영법	공직자윤리법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법

① 성과지향 ② 통제지향
③ 계획지향 ④ 관리지향

민행정학 1625페이지). 답 : ②

- ① 재정지출의 효율화 및 예산절감의 필요성 증대
- ② 재정운용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 요구 증대
- ③ 국가재정운용계획,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의 시행에 따른 체계적 성과관리의 중요성 증대
- ④ 지출의 합법성 제고 및 오류방지 요구 증대

19. 새로운 공공서비스 공급방식으로 제시된 BTO(Build-Transfer-Operate)와 BTL(Build-Transfer-Lease)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BTO 방식	BTL 방식
㉠ 실제운영의 주체	민간	정부
㉡ 운영시 소유권	정부	민간
㉢ 투자비 회수방법	사용료	임대료
㉣ 소유권 이전시기	준공	준공

-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ㄹ

– 4 –